

서울에 부는 당신의 바람

1987년 부산 출생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복수전공 여성학)

(전)포이등 인연공부방 교사

(전)2021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자세히 보는
정책 자료집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사건지혜

순서

당신의 바람을 이를 신지혜입니다

기본소득 서울	1. 당신이 누구든 연 150만 원 기본소득	4
성평등 서울	2. 재생산 권리 보장하는 서울	7
	3. 차별과 혐오 대신 평등과 연대	10
	4. 독박 돌봄 대신 함께 돌봄	12
	5. 성폭력 피해자 지원하는 서울	15
	6. 성차별/성폭력 없는 안전한 노동	17
	무주택자도 행복한 서울	7.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집'을
8. 모두에게 집다운 집을		22
공존하는 평등 서울	9. 공존하며 지속 가능한 서울	24
	10. 동물과 함께하는 서울	27

당신의 바람을 이를 신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입니다.

신지혜가 만들어 갈 ‘평등 서울 정책’을 살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부는 당신의 바람’ 신지혜가 만들 서울을 한 줄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람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소망과 소원을 의미하는 바람,
그리고 날씨 중 하나인 바람입니다.
‘서울에 부는 당신의 바람’은
당신이 서울에 바라는 것을 바람처럼 일게 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차별과 불평등 때문에 고통 받는 서울시민들은
평등이 서울의 기본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저 신지혜는
기본소득, 성평등, 주거권, 기후위기 극복 등을 주요 4대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일상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서울의 기본을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곧 집집마다 후보자의 정책을 담은 선거공보가 배달됩니다.
<자세히 보는 정책 자료집>에는 인쇄비용이 부족해 미처 다 담지 못한 정책을
쉽고 자세하게 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평등한 일상을 담은 정책이 어려우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부자나 권력 있는 사람들만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하는 불평등한 서울을 바꾸겠습니다.
차별 말고 평등을 꿈꾸는 당신의 바람이 서울에 휘날리게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혐오하지 않고 연대하는 서울,
당신과 함께 한다면 만들 수 있습니다.

모두가 나답게 살아가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장 후보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책 자료집을 펼쳐주셔서 고맙습니다.

1. 당신이 누구든 연 150만 원 기본소득

사회구성원 모두는 ‘공유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기본소득은 그 권리에 기초해서 모두에게, 조건 없이, 개개인에게 직접, 정기적으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현금으로 지급되는 소득이에요.



1 공유부: 사회의 모두가 함께 가진 것. 토지, 생태환경, 천연자원, 데이터, 문화자원 등은 어느 개인이 독점할 수 없는 공유부이다.

왜 기본소득을 나눠주나요?

서울에서 생긴 소득의 일부는 모두가 누려야 마땅한 것들이에요. 하지만 서울의 땅도, 공기도, 함께 모아낸 지식과 기술도, 특정 누군가의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자산인, 공유부입니다. 기본소득은 바로 그 공유부의 이익을 모든 시민들에게 나누자는 정책이에요. 특히 개인이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 여겨지는 ‘땅’이야말로 대표적인 공유부예요. 집은 누구에게나 마땅히 주어져야 할 거주 공간이지만 소수의 사람이 재산으로 독점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개의 집을 가진 사람들이 불평등하게 독점하는 재산을 세금으로 걷어서 모두와 기본소득으로 나눠 가져요.

일을 하든 하지 않든, 어리든 나이가 많든, 장애가 있든 없든, 모든 시민은 서울의 자산을 나눠가지고 원하는 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어요. 기본소득은 서울 시민이라면 아무런 조건 없이, 세대주가 아닌 개인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많은 재산을 가질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적은 재산을 가지면 그만큼 적은 세금을 내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지만 기본소득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고, 돈이 적은 사람은 내는 세금보다 더 많은 기본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나를 상처 입히는 가족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도, 생계를 위해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해왔던 사람도, 하루하루 돈 걱정으로 불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지원 받기 위해선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복지 제도에 모욕을 느꼈던 사람도, 기본소득이 있다면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150만 원을 마련하나요?

- (1) 서울에서 이미 쓰고 있는 돈 중 공유부에서 나오는 세금을 기본소득 예산으로 우선 이용해요.
- 부동산에서 나오는 재산세²와 취득세³를 지금보다 더 많이 걷어요. 많은 재산을 가질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요.
- (2) 공공 기관의 임대료, 입장료, 수수료 등 수입의 일부를 사용해요.
- (3) 서울시 예산으로 사용하고 남은 돈과 예상보다 많이 걷은 세금 중 순수하게 남는 돈(순세계잉여금)을 기본소득 예산으로 이용해요.

이렇게 서울시의 세금으로 모든 서울시민이 연 150만 원의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 말고도 기본소득 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있어요.

2. 재산세: 개인이 갖고 있는 땅, 건물, 집 등에서 걷는 세금.

3. 취득세: 땅, 건물, 집, 비행기, 배 등을 갖게 된 사람이 얻은 이익에 비례해 걷는 세금.

(4) 기본소득 토지세: 모든 토지에 매기는 세금을 말해요. 땅은 원래 모두의 것이죠. 어느 한 사람이 잠시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그 땅에서 나온 이익은 다시 모두에게 돌려주는 것이 옳아요.

(5) 기본소득 탄소세: 모든 탄소 배출에 매기는 세금을 말해요. 기후위기의 주범인 탄소배출을 낮출 수 있어요. 거둔 세금을 그대로 나눠주면 저소득층도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이 두 방안을 서울시 세금에 더하면, 연 150만 원의 기본소득을 더 받을 수 있어요.

다섯 가지 방안을 모두 합치면 연 300만 원의 기본소득이 가능해요.

기본소득 금액을 점점 확대해서, 2026년에는 월 30만 원(연 36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목표예요.

기존 복지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복지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존 복지에 기본소득이 합쳐져 저소득층 복지가 확대되어요.

2. 재생산 권리⁴ 보장하는 서울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⁵를 지원하고 의료접근권⁶을 보장해요.

대중 이용 시설마다 월경용품⁷을 무상으로, 상시 비치해요.

매달 월경용품 구입이 가능한 15,000원을 지급해요.



4 · 재생산 권리: 출산과 임신중지에 대한 권리 등을 의미한다.

5 · 임신중지: 임신한 태아/배아를 출산 전에 없애는 것. 이전에는 '낙태'라는 말을 주로 사용했다. 하지만 '낙태'가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여성이 출산 혹은 임신중지의 주체자임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점차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정책 기관에서도 해당 단어를 임신중지, 혹은 임신중절로 변경하는 추세이다.

6 · 의료접근권: 병원 등의 의료 시설을 쉽게 사용하고 치료받을 권리.

지금 서울은

여성들이 병원에서 여러 가지 차별적·모욕적인 일을 겪어요. 특히 여성의 성질환, 임신중지, 자연유산 등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터부시되기 때문에 여성전문병원에 방문하는 것조차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 자신이 원하는 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비율(미충족 치료율)⁷이 남성에 비해 여성이 2배 정도 높아요.

임신중지를 처벌하는 법이 폐지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성이 안전하게 임신중지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열악해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진 여성들은 월경용품 비용에도 부담을 겪고 있어요. 월경하는 사람들에게 월경용품은 필수품이지만 그 비용은 모두 개인이 부담하고 있어요.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일회용 생리대와 탐폰의 경우 가격이 높고 재사용이 불가능해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어요.

2019년 12월 서울에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조례인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개정안’이 가결되었지만 2022년 5월 현재까지도 시행되지 않고 있어요.

여성의 재생산권과 의료접근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1) 서울시 25개 보건소에 미프진(임신중지의약품)⁸을 상시 구비해요. 처방 이후의 부작용 관리를 위한 의료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요.
- (2)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을 원하는 누구나 무상으로 접종받을 수 있어요.
- (3) 서울시 여성전문 공공병원을 지어 임신과 출산 위주였던 여성 의료정책을 모든 여성의 건강을 위한 것으로 점차 변화시켜요.
- (4) 성평등 의료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민간 운영되는 병원에도 안심하고 갈 수 있도록 해요.

7. 미충족 치료율: 자신이 원하는 때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비율. 여성 15.2%, 남성 9.4%로 여성의 미충족 치료율이 남성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다.

8. 미프진(임신중지의약품): 임신중지를 위해 먹는 약의 이름. 프랑스 제약사가 개발한 부작용이 적은 임신중지약물이다. WHO(세계보건기구)에서 2005년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하면서 70개국 이상에서 판매되고 있다.

서울시 무상생리대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 (1) 월경용품 구입을 위한 월경카드를 매달 지급해요. 생리대와 탐폰뿐 아니라 진통제, 생리컵도 서울 전역 어디서든 15,000원 내로 구입할 수 있어요.
- (2) 공공기관, 학교, 지하철역, 약국 등의 공공시설에 월경용품 비치 의무화하고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제공해요. 지금도 공공기관에는 비상 생리대가 비치되어있지만 사용이 쉽지 않아요. 많은 여성들이 급하게 월경용품이 필요할 때, 비상 생리대를 사용하기보다는 근처 가게에 들어가 구입하기를 선택해요. 특히 지하철역은 생리대를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고 자판기로 판매하고 있어요.

3. 차별과 혐오 대신 평등과 연대

차별과 혐오에 대응할 수 있는 조례⁹⁾를 만들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평등하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서울을 만들어요.

모두가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이룰 수 있는 제도를 지원해요.



9. 조례: 서울시 등의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자체적으로 제정해 시행하는 법규.

지금 서울은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 벌어지고 있어요. 많은 소수자들이 실생활에서 혐오를 견디며 '나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소수자라는 이유로 취업에 불이익을 겪어도, 임금 차별을 받아도, 괴롭힘을 당해도,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없어요. '차별금지법' 제정도 계속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살거나 함께 살지는 않지만 서로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등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많은 복지 제도가 4인 정상가족을 기준으로 하거나, 결혼한 남녀부부 등 법으로 묶인 가족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들 대부분은 지원받지 못하고 있어요.

평등과 혐오 방지를 위한 조례를 만들고 법 제정에 노력하겠습니다.

(1) 서울시 차별 금지 조례를 제정하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도록 노력해요.

'차별금지법', '차별 금지 조례'는 누구든지 성별, 성적체성, 장애, 병력, 외모, 나이, 출신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혼인여부, 성지향성,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보호 처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해요.

(2) 서울시 혐오표현 피해방지 조례를 만들어 혐오표현을 제도적으로 막고 피해자를 보호해요.

(3) 성소수자의 권리를 포괄하는 성교육 지침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에서의 성교육을 의무화해요.

(4) 교육기관마다 인권센터를 설치해 차별과 혐오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요.

(5) 서울시 생활동반자 조례를 제정해서 다양한 가정의 형태를 보장해요.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동거, 혈연으로 이어지지 않은 생활공동체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서로를 가족으로 등록하면 기존 가족제도의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해요.

4. 독박 돌봄 대신 함께 돌봄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가사노동과 육아를 성평등하게 분담해요.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요.



지금 서울은

가사와 육아 노동을 주로 ‘엄마’가 책임지고 있어요. 하던 일을 그만두고 육아에 집중해야만 하는 여성들이 많아요. 육아휴직을 편하게 사용하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려운 사회 구조 때문이에요. 특히 코로나 이후 공공 교육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육아를 위해 일을 그만두는 여성이 늘어났어요. 남성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사용하는 사람은 매우 적어요.

많은 장애인, 노인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며 살지 못하고 시설에서 살아가요. 대부분의 시설은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 사업자가 운영해요. 그러다보니 운영비용을 줄이기 위해 제대로 된 돌봄을 제공하지 않아요. 시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일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장애인과 노인이 시설에서 나가 지역사회에서 사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가 어려워요. 필요한 돌봄 서비스, 정책, 사회적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서울시는 이미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을 발표했지만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아요. 탈시설¹⁰뿐만 아니라 탈시설 이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함께 진행되어야 해요.

성평등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직장문화를 바꾸겠습니다.

(1) 서울형 아빠육아휴직이 필수 보장되도록 만들어요.

서울시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남성의 배우자가 자녀를 낳으면 출산휴가 30일과 육아휴직 6개월을 반드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이 적은 기관에는 벌금 등 불이익을 주고 아빠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높은 기업과 단체는 지원해요.

(2)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 내에서 괴롭힘 당하거나 일을 그만두는 여성이 없도록 지원해요.

(3) 노동시간을 줄여서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함께 돌볼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요.

10 · 탈시설: 입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시설에서 나가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사는 것.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고 공공 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합니다.

(1) '제3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을 수립해요.

- 생활 전반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도시계획에 있어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인프라¹¹를 구축해요.

- 재건축, 재개발 시 장애인의 이동과 사용에 필요한 시설을 필수로 마련하도록 의무화해요.

(2) 서울시 생활보건센터를 설립해요.

- 생활 상담을 통해 탈시설 이후의 삶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요.

- 장애인, 노인, 청소년, 1인가구 등 생활취약가구를 위한 각종 서비스 지원을 시행해요.

- 의료와 돌봄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역의료기관과 함께 서비스를 지원해요.

(3)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제도를 마련해요.

(4)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서울시가 직접 고용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요.

11 인프라: 생산이나 생활의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구조물. 도로, 철도, 발전소 등의 산업 기반과 학교, 병원, 상하수 처리시설 등의 생활 기반이 있다.

5. 성폭력 피해자 지원하는 서울

성폭력을 방지하고, 서울시가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해요.



지금 서울은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가 제정된 지 1년이 넘었어요.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또한 이미 만들어졌지만 디지털 성폭력 피해 지원 중 가장 중요한 불법촬영물의 신속하고 완전한 삭제에 대한 지원은 매우 부족해요.

불법촬영물의 삭제까지 너무 오래 걸리고 수사와 처벌 또한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요. 이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가 커지고 회복까지 더 시간이 걸려요.

서울시의 피해자 지원 정책을 실행하고 확대하겠습니다.

(1)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확실하고 신속한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해요.

- 서울시가 불법촬영물 추적과 삭제 비용을 우선 부담해요. 이후 가해자에게 구상권¹²을 청구해요.

- 특별사법경찰을 배치해 빠른 수사 and 처벌을 진행해요.

(2) 성폭력 피해자의 안정적인 자립과 회복을 위해 주거를 지원해요.

(3) 성폭력 피해자에게 필요한 피해회복 기간을 서울형 유급휴가¹³로 보장해요. 피해회복을 위해 일을 쉬면서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12 · 구상권: 어떤 사람이 내야할 돈을 대신 내준 다음 원래 내야할 사람에게 내준 만큼의 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3 · 유급휴가: 평상시 일할 때와 같은 임금을 받으며 쉴 수 있는 휴가.

6. 성차별/성폭력 없는 안전한 노동

여성이 차별받지 않고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요.



지금 서울은

채용에서의 성차별, 노동환경에서의 성차별과 성폭력이 만연해요. 면접에서 여성 지원자에게만 ‘결혼할 것이냐’, ‘아이를 낳으면 일을 그만둘 것 아니냐’와 같은 채용과 관계없는 차별적인 질문을 하고 부당하게 점수를 낮게 줘서 문제가 된 경우가 많았어요. 어렵게 취업에 성공해도 여성은 직장에서의 성차별적 문화 때문에 이유 없이 낮은 임금을 받거나 진급에서 불이익을 경험해요. 결혼과 출산을 결정할 때도 눈치 보기 일쑤예요. 공공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성차별과 성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성평등하게 일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지금보다 확대하고, 잘 이뤄지도록 감시해야 해요.

공직사회에서의 성폭력 해소를 위해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¹⁴ 등이 실시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서울시에서부터 성폭력과 성차별을 해결하겠습니다.

- (1) ‘채용차별금지조례’를 제정해 채용 과정, 임금, 승진, 직업훈련, 해고 등에서 일어나는 성차별을 해소해요.
- (2) 서울시 반성폭력 업무지침을 마련해서 모든 사업장이 지킬 수 있도록 감시하고, 성폭력적인 상황에서 업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요.
- (3) 서울 소재 전 사업장에 성별임금공시제도를 시행해요. 모든 사업장이 성별에 따른 임금 차이를 계산하여, 모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요.
- 서울시에서 매년 성별임금격차 현황을 발표하고, 격차가 큰 사업장에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해요.
- (4) 단체교섭¹⁵ 시 노동자가 아니라, 고용한 사람 쪽에서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안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해요.
- (5) ‘서울시 공공부문 성폭력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지켜지지 않던 기존 제도들을 실행해요.

14.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이 곧바로 일을 그만두도록 하는 제도.

15. 단체교섭: 노동자들이 모인 단체의 대표자와 고용인이 노동 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해 의논해서 합의하는 것.

7.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집’을

서울시가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공공임대주택¹⁶을 직접 빌려줘요.
혼자 살아도 괜찮은 서울을 만들어요.



16 · 공공임대주택: 정부의 지원으로 건설하거나 사들여서 저소득층 주민에게 낮은 가격으로 빌려주는 집.

지금 서울은

집이 모두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주거공간이라기보다는 사고 팔 수 있는 재산으로 여겨져요. 소수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집을 독점하고 있고, 집으로 돈을 벌어도 괜찮다고 하는 정책들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올라요. 집값이 오르면 월세도 오르기 때문에 자기만의 집 없이 월세를 내고 사는 사람들의 생계에 타격을 줘요. 특히 혼자 사는 1인 가구에게 월세는 더욱 부담이 되어요. 2020년 기준 서울의 34.9%가 1인 가구이고, 1인 가구의 숫자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요. 여성 1인 가구의 경우 범죄에 노출되기 쉬워요. 하지만 현재의 주거 정책과 복지 제도가 4인을 기준으로 하는 정상가족¹⁷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1인 가구는 큰 지원을 받지 못해요.

무주택자 시민들과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1) 서울에 새로 짓는 건물과 비어있는 건물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해요.

공공임대주택으로 쓰기 위한 건물을 추가로 짓지 않아도 서울에는 충분히 많은 건물이 있어요. 그러나 이미 새로 짓기로 한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 건물들 중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요. 그리고 원래 있던 빈 건물들을 서울시가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해요.

(2) 그렇게 늘린 공공임대주택 중 30%를 1인 가구에 할당해요.

(3) 혼자 살아도 안전한 집을 보장해요.

특히 지금 마련되어 있는 '1인 여성가구를 위한 안심 주거 정책 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지원 내용을 확대해요.

- 1인 여성가구 안전 지원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해요.

-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자치구에서 정책을 시행하도록 의무화해요.

- 각 자치구의 정책 시행을 감시하고 예산을 지원해요.

(4) 재건축¹⁸ 및 재개발¹⁹ 시, 임차인²⁰을 비롯해 그 건물에 살던 사람들을 위한 이주 대책과 재정착 계획 등을 세우도록 해요. 대책이 있을 때만 사업을 승인해요.

(5) 주거급여²¹ 지급 시 '자기부담금'을 폐지해요.

17 정상가족: 아빠, 엄마, 자녀로 이루어진 이성에 기반의 전형적인 핵가족 형태의 가족. 이러한 모습의 가족만이 사회적으로 '정상'으로 취급된다는 인식에서 만들어진 단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 풍토를 반영한다.

18 재건축: 땅을 가진 사람이 그 땅 위에 지어진 건물을 없애고 새로운 건물을 다시 짓는 것.

19 재개발: 낙후된 지역의 낡은 건물을 모두 밀어버리고 새로운 건물이나 도로 등을 새롭게 짓는 것.

20 임차인: 임대인이 소유한 물건(주로 집)을 돈을 내고 빌려 쓰는 사람.

21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부담금’을 내야해서 온전히 주거급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을 증명해도 온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자기부담금을 폐지해서 모든 수급자 가구가 온전한 주거급여를 지원받도록 해요.

(6) 아동·청소년을 위한 입주 조건을 마련하고 확대해요.

- 자녀가 많은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충분히 넓은 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해요.
- 보호종료아동²²과 탈가정 청소년²³도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대상에 포함해요.

22 · 보호종료아동: 보육원 등의 보호 시설에서 살다가 만 18세가 되면 퇴소하여 홀로 살아야하는 아동.

23 · 탈가정 청소년: 부모 등의 원가족과 함께 살던 집에서 나온 청소년.

8. 모두에게 집다운 집을

모두가 충분한 공간, 쾌적한 환경의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요.



지금 서울은

많은 사람들이 겨우 누울 공간밖에 없는 좁은 집, 개인 주방과 화장실이 없는 집, 환기가 되지 않아 곰팡이가 쉽게 피는 집, 낡아서 수리와 보수가 필요한 집에서 살아가요. 서울의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 이래로 바뀌지 않았고, 집다운 집의 기준이라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요. 심지어 고시원, 비닐하우스, 쪽방촌 등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 공간은 사람이 살고 있음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더욱 열악한 상황이에요. 이처럼 최저주거기준 제도가 부실한 탓에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임차인²⁴이 많아요. 법적 지원을 받는 데는 많은 조건이 필요한데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임대인²⁵이 임차인에 비해 법적인 정보에 접근하기에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갈등이 발생하면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집을 서울시가 보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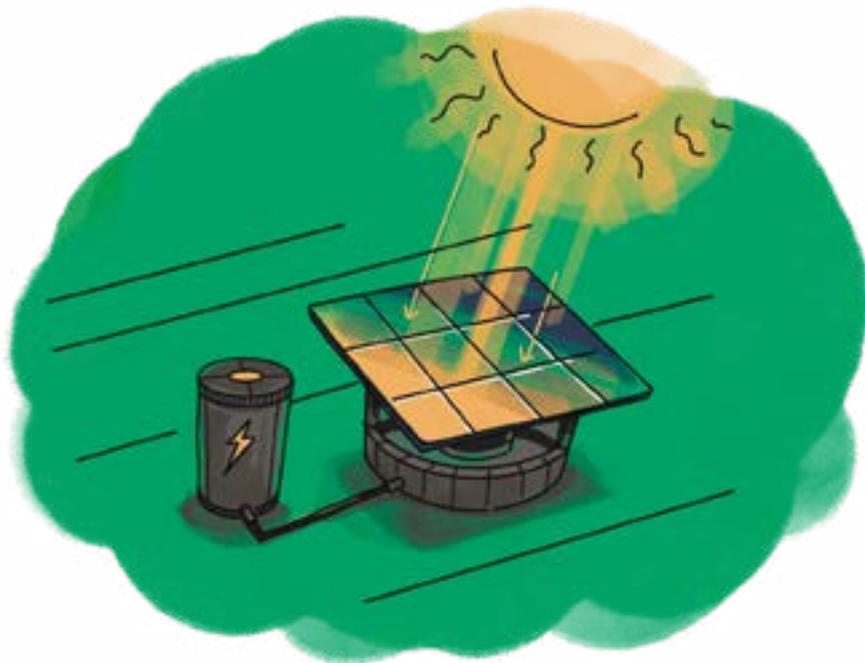
- (1) 최저주거기준을 충분히 높여요. 그리고 모호한 최저주거기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요. 주택의 면적, 방음, 환기, 채광, 난방, 소음, 악취, 자연재해, 재난 관련 설비 등을 꼼꼼히 작성해요.
- (2) 고시원, 비닐하우스, 쪽방촌 등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 주거공간을 최저주거기준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요.
- (3) 최저주거기준의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집주인에게 경고를 줘요. 그래도 지키지 않으면 해당 건물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승인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줘요.
- (4) 주거약자의 범위를 넓혀요. 노숙인, 정신질환자, 그리고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 공간의 거주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형을 새로 만들어요.
- (5) 무주택자 가구의 주택 수리, 이사 등에 쓰이는 거주비용을 연 50만 원 내에서 지원해요.
- (6) 임차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서울시에서 법적 분쟁을 관리하고, 대리 진행을 지원해요.
 -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 및 지원정책 안내 서비스를 확대해요.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일단 서울시가 지급하고 집주인에게 청구해요.

24 · 임차인: 돈을 내고 물건을 빌려 쓰는 사람. 주거 계약에 있어서는 남의 집에 세들어 사는 사람을 이른다.

25 · 임대인: 돈을 받고 물건을 빌려 주는 사람. 주거 계약에 있어서는 집주인을 이른다.

9. 공존하며 지속 가능한 서울

탄소는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미래를 꿈꾸는 서울,
다른 지역의 자원을 끌어오지 않고 자체적으로 지속 가능한 서울을 만들어요.
서울시가 데이터 혁신을 주도하고 시민들에게 이익을 나눕니다.



지금 서울은

서울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에 비해 훨씬 많은 전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서울에서 쓰는 전기는 아주 소량만 서울에서 직접 만들고 나머지는 다른 지역에서 끌어와요. 그 과정에서 많은 양이 사라지면서 탄소를 배출해요. 대량의 쓰레기가 태워지고 땅에 묻히고 있어요. 서울에 너무 많은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가 내뿜는 매연은 서울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20%를 차지해요.

정치권에서는 당장의 이윤에만 집중하느라 지속 가능한 서울을 만들 방법을 고민하지 않아요. 하지만 모두 함께 안전한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는 탄소배출을 지금 당장 멈출 방안을 고민해야 해요.

디지털 시대가 찾아오면서 데이터 기반 사업이 크게 발전하고 있지만, 모두의 몫으로 돌아가야 할 데이터 산업의 이익을 각각의 기업이 독차지하고 있어요. 또, 디지털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려운 디지털 취약 계층이 점점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어요. 데이터 산업의 이익과 편리함은 서울 시민 모두가 평등하게 나눠가져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 산업의 공공화²⁶가 필요해요.

자체적으로 지속 가능한 서울, 탄소 배출 감축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1) 2030년까지 서울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20%를 서울에서 만들고 사용하는 걸 목표로 해요. 이를 위해 태양광 에너지 사업을 추진해요.

공유지분²⁷형 태양광사업: 서울시가 직접 태양광 사업에 투자해 공공성을 높여요. 여기서 난 수익은 기본소득으로 사용해요.

(2) 건물단위로 온실가스를 얼마나 내뿜는지 감시하고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건물에 환경부담금을 부여해요. 서울의 모든 건물 옥상에 점진적으로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요.

(3) 낡은 자원회수시설을 수리하고, 서울시가 직접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며 노동 환경을 개선해요. 자원회수시설은 재활용되지 않는 쓰레기를 태워 폐기하는 소각장이예요.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생기는 높은 열을 이용해 발전기를 가동할 수도 있어요.

(4) 노카(No-Car) 시범도시 사업과 공공 자동차 대여 사업을 확대해요.

(5) 자전거와 같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이동수단을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요.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고 안전한 자전거 사용을 위한 방침을 마련해요.

26 · 공공화: 국가나 사회 구성원에게 두루 관계있는 것으로 됨.

27 · 공유지분: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보유하고 있는 지분.

직접 데이터 산업에 투자해 공공성을 높이고 그 이익을 기본소득으로 나누겠습니다.

(1) 서울 스타트업 공유지분형 ‘디지털뉴딜기금’을 설치해요.

무료 소프트웨어 개발, 협동조합 등 공익에 기여하는 스타트업²⁸ 기업에 서울시가 직접 투자하고, 서울시가 투자한 만큼의 수익을 모든 서울 시민과 평등하게 나눠가져요.

(2) 모든 시민에게 무상 5GB 모바일 데이터를 지급해요.

(3) 공공 Wi-Fi의 보안을 강화하고 유지·보수에 힘써요.

(4) 디지털 취약 계층을 위한 디지털 정보 교육 서비스를 확대해요.

28 스타트업: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기업. 일반적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10. 동물과 함께하는 서울

서울의 동물원을 동물안식처로 바꾸고
육식과 공장식 축산을 점차 줄여나가요.



지금 서울은

동물원, 수족관 등 작은 공간에 동물을 가두고 전시해요. 전시된 동물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답답하게 지내며 생명이 아니라 구경거리로만 취급받아요.

동물실험이 연구소와 교육현장에서 계속되고 있어요.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은 겪을 필요 없는 고통을 겪고, 실험 중에 목숨을 잃기도 해요.

좁은 우리에 많은 동물들이 갇혀 더러운 환경에서 고통스럽게 살다가, 음식이 되기 위해 도살당해요. 이를 공장식 축산이라고 해요. 공장식 축산은 서울 외곽에서 많이 이뤄지지만, 공장식 축산으로 만들어진 육식 식단은 서울에서 많이 소비돼요. 서울에 고기를 제공하기 위해 길러지는 동물이 많을수록 탄소배출이 늘어나고 환경이 파괴돼요. 서울에서 육식을 줄이면 공장식 축산으로 고통 받는 동물도 탄소배출도 줄일 수 있어요.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비윤리적 사업을 금지하고 채식을 지원하겠습니다.

- (1) 동물권 기본 조례를 제정해요.
- (2) 동물원을 없애고 동물들의 새로운 안식처를 만들어요. 서울 시내 동물 공연을 전면 중단해요.
- (3) 동물실험을 줄여나가요.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연구를 지원하고 실험동물을 구조해요.
- (4) 육식을 조금씩 줄여나가기 위해 10년 동안의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요.
- (5) 공공기관의 구내식당에 채식 식단 공급을 의무화하고, 교육기관의 무상급식에도 채식 식단을 보장해요.
- (6) 비건²⁹ 제품의 개발, 제작, 유통을 지원해서 서울 시민의 식단을 점차 바꿔나가요.

29 비건: 고기, 우유, 달걀 등의 동물성 식품을 전혀 소비하지 않는 적극적 개념의 채식. 나아가 동물을 희생시켜 얻은 의류나 동물실험을 거친 제품 등 또한 사용하지 않는다.

『자세히 보는 정책 자료집』 끝.

모두가 나답게 사는 서울,
함께 일으켜 주세요.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기호 4번 신지혜